

1. 서언

우리는 과거 30~40년간 공식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근대화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줄기차게 그 과정을 수행해왔다. 수자원정책과 수질정책을 포괄하는 물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성공적인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하천치수 등 각종 근대적인 물 관리 기술, 제도 등을 도입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논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97년 이후 나타난 댐건설 반대운동은 국책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새만금 갯벌 매립 반대 운동과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 반대 등으로 이어



이미 홍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hong14@chol.com)

한국의 하천관리 변천

:강변개발에서 생태하천으로¹⁾

졌다. 결론적으로 물 관리 정책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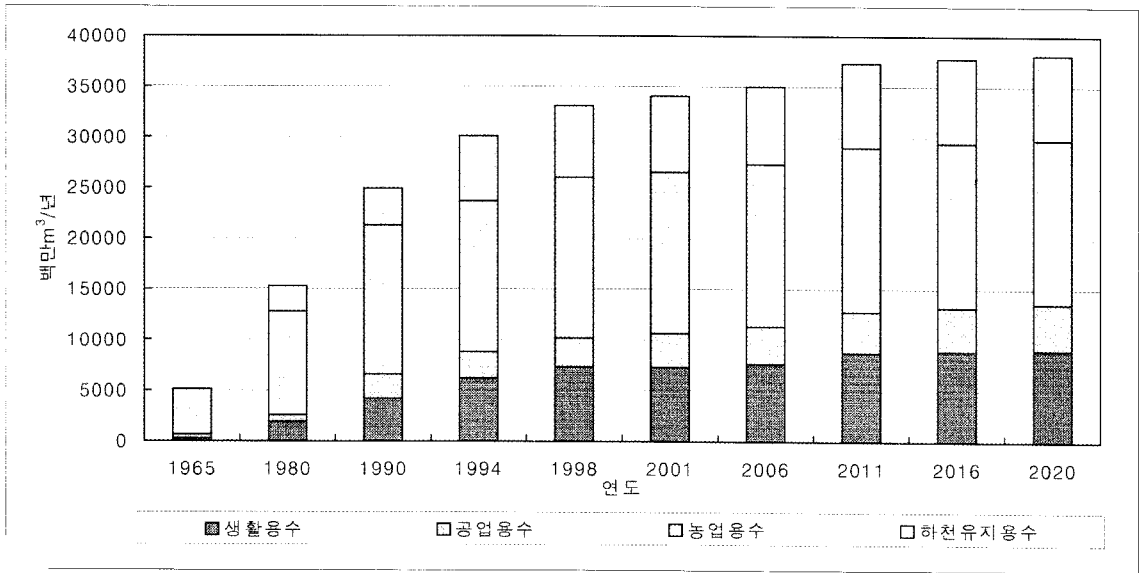
이러한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협력의 단서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물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하천관리정책은 물 정책 중에서도 '환경'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두 개념이 조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다. 이에 하천관리정책이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서술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의 제도를 점검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 정책을 연대순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정책의 시간적 범위는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1894~2007)로, 첫 번째 시기는 일제강점 시대 및 해방 후 혼란기로 20세기 초반부터 5.16 쿠데타까지(1894~1960)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제3·4공화국 시기(1961~1979)로 흔히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로 지칭되는 기간이다. 세 번째는 80년대 및 90년대 초반 시기(1980~1992)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한 기간이다. 마지막 시기는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기(1993~2007)로 90년대 중반 이후시기로 구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물 정책에 있어 두 번째 시기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60~70년대를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시작된 출발점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인한다. 근대화는 경제적인 면, 객관적인 지표와 사회적인 기준들을 통합적으로 포괄하여 사회전반이 근대화되었다고 평가할 때, 그리고 비농업인구가 많아지고 '나 스스로 잘 살아보자, 부자가 되어 보자'하는 개혁에 대한 의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확장될 때를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를 근대화시기로 지칭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주도의 근대화 경향이 '80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박정희 시기는 물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내용 도출은 광범위한 문헌연구 및 해방 이후 현재까지 물



〈그림 1〉 용수분야별 공급 추이

자료: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Water Vision 2020)』, p.34.

정책 관련 신문 검색(조선일보)이 이루어졌다. 조선일보를 검색한 이유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으며, 과거 신문까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연구의 범위가 워낙 장기간이고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다른 신문(특히 동아일보)까지 포괄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글의 경우 ‘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신문기사가 사용되었으므로 대상 신문에 따른 편차는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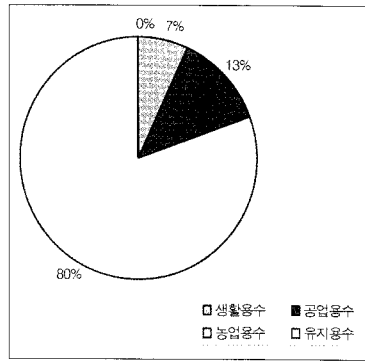
2. 한국 물 정책의 변화

하천관리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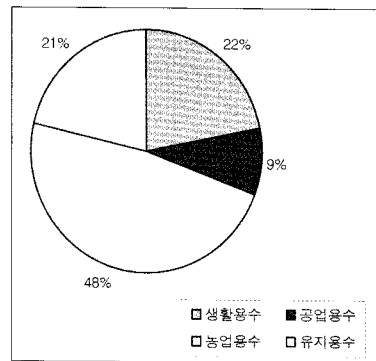
히 전반적인 우리나라 물 정책의 변화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용수분야별 공급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65년 연간 50억톤의 물을 공급하던 것이 2006년에는 350억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물 공급은 7배로 늘어난 셈이다. 생활용수(5억 6천만톤에서 73억

톤으로), 공업용수(10억톤에서 29억톤으로), 농업용수(65억톤에서 158억톤으로) 모두 공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70년대까지는 하천유지용수라는 개념이 전무하다가 2001년에 공급된 하천유지용수가 71억톤 수준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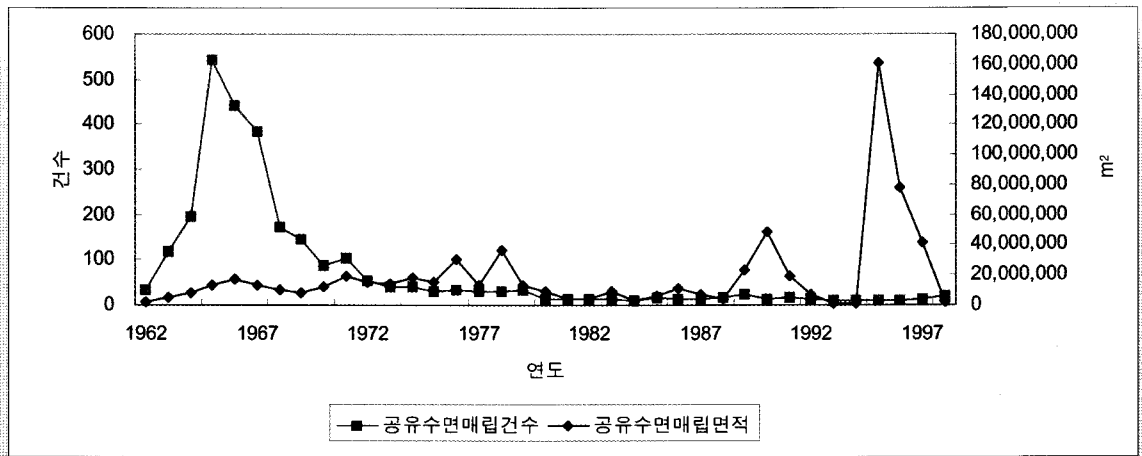
〈그림 2〉 용수분야별 점유율(1969년)



〈그림 3〉 용수분야별 점유율(2006년)

〈그림 2〉와 〈그림 3〉은 용수분야별 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다(1969년과 2006년). 35년 동안 농업용수는 80%에서 48%로 줄어들었으며 생활용수는 7%에서 22%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농업부문이 쇠퇴하고 도시화, 산업화가 확대되었다

1) 이 글은 홍성태 외(2006), 『한국의 근대화와 물: 여실린 필자의 글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함을 밝혀둡니다.』



〈그림 4〉 공유수면 매립건수 및 매립면적 추이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재구성

는 근대화의 일반적인 현상이 물 정책에에도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공업용수의 경우는 전체에서의 점유율이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수요증가는 유지용수로 2001년 점유율이 21%로 생활용수에 육박하고 있다. 쾌적한 하천관리를 위한 개념인 유지용수가 80년대 이후 도입되었으며,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이러한 자료들은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물 정책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댐 정책과 상하수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댐 정책은 일제 강점시기부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사업으로 추진된 정책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소양강댐 건설을 대표로 많은 댐 개발 사업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댐 개발이 주춤해지기 시작한 것은 동강댐 저지로 대표되는 댐 개발 반대운동의 전개이다. 실제로 영월 동강댐 계획의 백지화는 이후 댐 건설 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이후 댐 건설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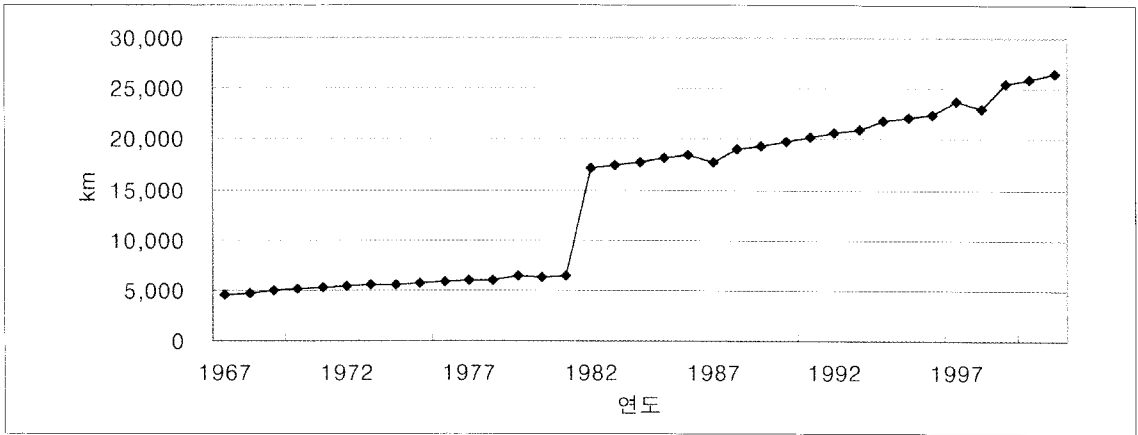
상하수도 정책 역시 도시화의 추세에 있어 도시보전 문제와 밀접히 연계됨으로써 꾸준한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다. 6·25 전쟁 직후 16%에 불과하던 상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90%를 상회하고 있다. 상하수도의 확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댐 정책과 관련하여 원수를 광역댐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한다.

3. 하천관리 정책 추이

하천관리 정책은 크게 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 정책과 하천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수정책 및 생태하천조성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기의 경우 매립정책과 치수정책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시기는 친환경적인 하천개수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하고 있다.

〈그림 4〉는 공유수면 매립건수와 매립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매립건수는 1962년 33건으로 시작해 1965년 543건으로 최고치를 이루어 1971년까지 100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8년에는 21건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면적은 점차 대규모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62년 1,616,023m²이던 공유수면매립면적은 1995년 160,532,990m²로 최대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매립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면적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수 정책의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림 5〉의 하천개수 연장추이이다. 1967년 4,600km에 불과하던 하천개수는 1981년에는 6,412km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2년 17,186km로 일 년 사이에 2배를 넘어서 3배에 이르는 대폭적인 증가를 보인다. 일 년 사이에 이러한 증가세는 80년대 초반의 한강종합개발의 여파로 보인다. 한강종합개발은 세계의 우수한 도시 중 가장 아름다운 강을 소유하면서도 그 강을 본연대로 가꾸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강종합개



〈그림 5〉 하천개수 연장추이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재가공

밭은 양안에 설치한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시켰고 그나마 조성된 고수부지는 여름에는 물에 잠겨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한강종합개발의 성과는 지방으로 무비판적으로 고스란히 전이되어 지방의 상당수 자연형 하천들이 한강과 같은 고수부지를 형성하기 위해 하천을 직강화 시키는 현상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90년대 중후반에는 지방의 하천관리 정책이 이러한 치수 및 양안 개발정책과 생태하천 개발정책이 혼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하천관리 정책 분석

전체적인 하천관리 정책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정책을 시기적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 시기의 경우 기본적인 하천조사서 발간으로 정책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강변을 매립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정책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환경재가 이용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인 '80년대의 경우 이수·치수·천수공관 확보라는 명목 하에 한강종합개발을 수행한 것을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에는 직강하천과 시멘트로 황량해진 강변 공간, 소규모 하천복개에 대한 반대여론이 제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양재천, 청계천 복원 등 대안적인 하천개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4-1 일제강점 시대 및 해방 후 혼란기

식민지 시대 일본은 조선하천조사 명목 하에 대대적인 하천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식민지 경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말까지 한강은 경원선 철길이었고 뚝섬도 이름 그대로 섬이 되는 일이 잦았다. 7월에서 9월까지의 3개월간 며칠씩 집중호우가 내리면 한강은 바다가 되었고 갈수기에는 백사장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 당시의 한강물은 관리가 되지 않았고 강물은 자원이 아니었다.

4-2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하천관리 정책이야말로 경제적인 이유로 하천변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청계천 복개공사와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이다. 또한 지방에서는 동진강, 삼포호 등 방조제 및 간척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청계천의 경우 다시 복원되었으므로, '90년대 후반 이후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강변개발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표 1) 한국의 하천관리 정책 역사

시 기	정 책	내 용	특 성
일제강점 시대 및 해방 후 혼란기 (1929 ~ 1960)	1928 조선하천조사서 발간		식민지영역을 위한 하천조사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1961 ~ 1979)	1961. 12 청계천 복개공사 완공 (1958-1961) 1961. 12. 19 공유수면관리법 제정 1961. 12. 30 하천법 제정 1967. 12. 27 여의도 윤중제 공사 기공 1968 한강개발 3개년 계획 1968 여의도 개발 시작(1972년 완료) 1968 한강 서빙고 지구 개발 시작 (1973년 완료) 1968 한강 성수지구 개발 시작 (1972년 완료) 1968 한강 풍납지구 개발 시작 (1975년 완료) 1969 한강중지도 개발(1973년에 완료) 1969 한강 압구정지구 개발 (1973년에 완료) 1970 한강 반포지구 개발(1972년 완료) 1971 한강 잠실지구 개발(1974년 완료) 1972. 12 동진강 수리간척사업 준공	1973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정 1974 한국수자원개발공사기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명칭 변경 1975. 1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79. 10. 26 삽교호 방조제 준공	강변 개발시대
80년대 및 90년대 초반 시기 (1980 ~ 1992)	1981 전국 주요 하천 기초조사(1983년 완료) 1982 한강하류부 종합개발 (1985년 완료) 1983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1985. 2. 1 한강, 낙동강, 섬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고시 1985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		치수 및 이용을 위한 한강 종합개발
90년대 중반이후 시기 (1993 ~ 현재)	1995 1.5 소하천정비법 제정 1995 양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시작 1996 환경단체들 하천복개 반대운동 전개	1999 새서울 우리한강사업계획발표 2001 수자원국에 하천관리과 신설 2002 청계천 복원계획 발표 2003. 7. 1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 복원공사 시작 2005. 9. 청계천 복원공사 완료	생태적 여건을 고려한 하천개발 대두

현재의 한강변의 모습을 보자. 잠실에서 김포까지 한강 연안 양쪽에 거의 끊이지 않고 아파트의 숲이 병풍을 이루고 들어서 있다. 동부이촌동처럼 재건축된 곳은 특히 그 병풍의 벽이 두텁고 높다. 그리고 강을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가 달린다. 북쪽 연안에는 고가도로까지 겹쳐져 있다. 한강변이 이러한 변화를 겪은 것은 1968년 '불도저' 김현욱 시장이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을 착수했기 때문이다. 세운상가, 낙원상가, 청계천 고가도로, 광화문 지하도 등을 건설하면서 얻게 된 별칭인 불도저 시장은, 제1한강교에서 김포비행장까지 제방을 쌓아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2만4천 평의 금싸라기 택지가 생겨나는 것을 목도한다. 여기에 착안한 김시장은 1968년부터 한강개발 3개년 계획에 착수한다. 그 핵심은 윤중제를 쌓아 여의도를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또 하나의 핵

심은 한강변 74km 양안에 제방도로를 만들면서 697,000평의 택지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사업비는 택지 매각으로 조달할 구상이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현재 국토해양부(현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공사)이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당시 소양강댐을 짓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했는데,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등으로 인해 한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발생한 유휴지를 매립해 분양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수자원개발공사는 간판을 달고 그 첫 사업으로 한강이촌동 백사장의 준설면허를 건설부로부터 따낸다. 이렇게 하천을 매립해서 택지를 제공하는 사업은 여의도, 서빙고, 성수, 풍납, 압구정, 반포, 잠실로 확대된다. 이러한 한강변 택지 개발 사

업이 얼마나 당시에 각광을 받았는지는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참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국유하천에 면허를 받아 제방을 쌓는다. 그것도 건설업 비수기인 겨울철에 놓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이용해서이다. 그 다음해 비수기에 모래를 부어 택지를 만든다. 그러면 정부기관이나 국영업체에서 일괄 매수해 간다. 아파트를 지으면 짓는 대로 돈이 된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히 늘어나는 신중산층을 수용할 주택이 대량 공급되니 좋고, 강변에 자동차도로가 생겨나니 좋으며, 홍수를 막을 제방이 생겨나니 좋았다. 재벌급 건설업체가 자라나면 고용이 늘어나서 좋고 중동에서 건설수주를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재정투자 없이 이룩되는 일이었다. 그러니 강변에 나무가 없다든가, 아파트가 뻗뻗이 들어서 한강의 경치를 막는다는가 하는 데는 신경 쓸 겨를이 있었을 것인가?(강홍빈·주명덕, 2002:134에서 인용).

4-3 '80년대 및 '90년대 초반

이러한 한강은 누가 봐도 국민의 쉼터는 아니었다. 80년대 이후 수질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한강은 골칫거리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환경권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제5공화국은 한강을 국민들의 쉼터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것이 바로 한강종합개발사업이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80년대 및 '90년대 초반의 하천관리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총 3천4백83억원을 들여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실시된 사업이다.

병든 한강을 살리고 한강운하시대를 여는 한강종합개발계획이 확정돼 28일 착공됐다. 총사업비 3천4백83억원을 들여 오는 85년까지 추진될 이 사업은 하상을 정리, 저수로를 만들어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뱃길을 만들고 강변 고수부지에는 체육공원, 유원지,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꾸며 시민을 위한 휴식 및 워낙시설로 확보하고 강남 쪽 제2한강교~전

현대교 간 26km에 강변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 동-서 관통도로를 개설하며, 탄천, 청계, 중랑, 난지도, 안양천에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고 강 양편에 하수관로를 묻어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하수관을 통해 강 하류로 흘려보내 한강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역사다(조선일보 1982년 9월 29일 기사).

하천을 직강화 시켜 물을 하류로 빨리 배수시켜 홍수나 호우로부터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직강화는 홍수피해를 하류에 집중적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하나 직강화와 더불어 제기된 문제는 생태계 파괴 문제였다. 하천은 하나의 생태계로 자연의 시스템이다. 하지만 직강화된 하천은 이러한 기존의 자연적인 물 순환 시스템이 인공적인 물 환경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 한강시민공원 전경



〈그림 7〉 한강제방 붕괴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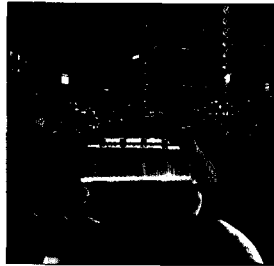
4-4 '90년대 중반이후 시기

하지만 이러한 개발방식은 '90년대 들어 지양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한강, 낙동강과 같은 대규모 하천에서 소규모 하천으로 전환되었으며, 따라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진 하천복개 운동은 지방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양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과 청계천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양재천의 사례는 이제는 지방에 널리 알려져 지방마다 대표적인 생태하천들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의 전주천, 부산의 온천천, 수원외의 수원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청계천 복원은 삼성경제연구원이 선정한 2005년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지정될 정도로 하천관리정책에 있어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청계천의 경우 진정한 하천복원인지, 혹은 단순한 조경사업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등 진정한 생태하천 가꾸기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양계천 복원



(그림 9) 청계천 복원

5. 맺음말

이 글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하천관리 정책의 흐름을 통해 특성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하천관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치수를 목적으로 강을 직강화 시켰으며, 강 양안에 강변도로와 아파트를 비롯한 건설 사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직강화 시킨 하천은 하류로 대규모로 물을 범람시키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근래에는 생태적 특성을 고스란히 살린 자연형 하천의 조성이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히 한국의 하천 관리는 강변개발 시대에서 생태하천 조성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변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강변개발에서 생태하천으로의 정책변화는 인간이 처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합리성'과 이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두 이해하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에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의 근대화가 '위로부터의 근대화', '타율적 근대화'에 영향 받

은 바가 크기에 근대화 시기의 하천관리 정책은 강변개발 및 치수정책에 치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안적인 근대화로 각 사회가 가진 고유한 문화와 가치 그리고 구조에 맞는 근대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구현하는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자율적 근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생태하천 사업은 이러한 가치관에 근거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근래에 한국을 방문한 올리히 벡(Beck U.)은 이를 성찰적 근대화(혹은 재귀적 근대화)라는 말로 요약한다. 그에 의하면 1차 근대화론은 전통사회를 해체하고 이에 서구적 발전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시화, 기술성장,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균등발전과 위험사회의 생태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근대화 자체가 근대성의 본질적 구조 및 원칙과 충돌한다. 그러나 근대화는 자의식화된 혁신과정이다. 즉, 근대화는 스스로 노후화되고 혁신할 수 있는 과정인데, 이처럼 스스로 반성하고 노후화된 것을 혁신함으로써, 결국 근대를 완성해 가는 것이 성찰적 근대화이다. 성찰적 근대화는 근대화가 자신이 생산한 위험과 위험을 통해 자신의 노후화된 토대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이를 깎아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미래를 보다 더 근대답게 만들어 나가는 자동적 사회변형과정인 것이다. 이런 혁신 과정이 전제될 때 고전적 1차 근대화인 기술진보, 경제성장, 도시화는 이후의 재귀적 근대화 과정에서 대안적 기술진보, 생태친화적 경제성장, 생태도시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이미 많은 학자들은 하천관리 정책에 있어 지방분권적이며 거버넌스적인 물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시민이 먹는 상수도의 수원을 당해 시 지역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수원을 지자체 내에서 확보하는 방안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다'라는 주장과 '80년대 이전까지 물 관리의 주체는 기술자, 경제학자, 환경전문가, 사회학자의 시대였다면 '90년대 이후에는 해당지역 주민, NGO, 대중적 승인이 주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된 하천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향후 어떠한 진보된 생태하천을 우리에게 안겨줄는지 기대가 크다. ●